"기업 견제장치" vs "헤지펀드 먹잇감" 상법개정안 이견

정부-재계 '공정경제 3법' 공방

류영재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정안건 99.64% 원안대로 가결 분리선출로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감사위원 선임 때 3%룰 적용하면 상장사 87% 헤지펀드 인사 선임 군 작전회의에 적군 참여하는 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류영재 포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기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경제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다. 주식회사 운영 과정에서 대주주를 견제해 공정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3명 중 최소 1명을 분리선출 하자는 것이다. 통상 감사위원은 이사를 선출한 뒤 이들 가운데 감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사회 구성에는 대주주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감시해야하는 감사위원 역시 대주주의 입맛대로 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와 함께 감사 분리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주주의 거수기에 머문다는 감사 제도를 정상화하고 기업 경영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21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류영재 포럼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향한 걸음마에 불과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이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견제장치"

류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가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사회가 사실상 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연간 6722건의 안건 중 99.64%가 원안 그대로 가결되고 그 중 단 3건만이 부결되며, 그 중에서도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은 100% 가결된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재계에서 우려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이전에는 1명이 아닌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증권거래법이 존재했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

류 회장은 "2009년까지는 1명이 아닌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지만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이 전혀 없다"면서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기관투자자를 많이 접해본 근거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는 경영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관심도 없다"면서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에 반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갈라파고스 규제"

반면 재계는 상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감사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 해외 투기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외부주주가 연합해 감사 선임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되면 상장사 87%는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며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 기업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AF가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지난해 현대차 주총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다. 당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

또 정 회장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사나 이사 선임 제도를 통해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일상 경영관련 비밀정보가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으로 새나갈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적군 작전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적군은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여해 비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韓-英, 과학·기술협력 저변 확대 나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화상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공동으로 21일 '제14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는 1985년 체결된 한-영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해리엇 윌러스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는 신규 공동연구 제안 및 그간 진행됐던 협력 사업들의 평가 등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의학연구위원회는 감염병 분야 공동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수상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 종합해사 등 5곳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인 선일금고제작, 유엔아이, 종합해사, 한방유비스 그리고 중견기업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이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들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9곳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명문장수기업들이 좀더 확실한 혜택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시 보증료 감면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차기 이사장에 '쌍병두'?… 후보 4명 압축

(손병두·민병두)

정지원 KRX 이사장 임기 곧 만료
후임자 모집공고 없이 소문만 무성
손병두 선두지만 독보적 '1강' 없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에 대해선 소문만 무성하다. 거래소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임기 종료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됐던 모집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임기는 이달 말 2017년 11월 2일부터 시작된 3년 여정의 종지부를 찍지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만 구성된 상태다. 거래소 정관에 따르면 거래소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임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자본시장 전반이 시끄럽다는 점과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등 갖가지 추측만 나오고 있다. 거래소 내부와 금융권에서도 "이 정도로 선임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거래소 이사장은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각 1명, 금융투자협회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하면 주총에서 최종 선임된다.

◆손병두 선두?…민병두·정은보·유광열 하마평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사장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거론된다. 거래소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경제관료 출신이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장 선두에 있지만 아직 독보적인 '1강'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거래소 관계자도 "언론 보도 외에는 추측만 무성할 뿐 들리는 얘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1964년생인 손 부위원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사무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국내외 금융 정책에 모두 밝다는 점에서 차기 거래소 이사장의 적임자로 꼽힌다. "학구적이고 온화한 성격"이라는 것이 내부 평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에 대해 "점잖고 학구적인 편으로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뽑혔다는 점에서 신망도 두텁다.

민병두 전 의원은 거래소뿐 아니라 차기 은행연합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으로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그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보인다. 개인 휴대전화 착신을 금지해 놓은 채 차기 행선지에 대해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금융통'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8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송태화 기자 alvin@